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국민건강 중심의 환경보건정책 본격 출범

- 환경부, 200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5대 목표, 23개 이행과제 추진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사회(요람에서 요람까지) 구축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환경관련 연구·교육·산업·비즈니스의 종합환경 콤플렉스인 에코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연간간 8천만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제2차 수도물 수요관리종합대책(2007~2015) 수립으로 2015년까지 10.6억톤의 용수를 절감한다.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를 강화하고 산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생후 4~5세까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발생을 추적조사하며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에 대한 화학물질 실태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는 강화하되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국토환경관리 추진한다.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평가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는 제고하고 협의기간은 단축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한다.

생활주변 환경질의 가시적 개선으로는 수도권 지역 배출 총량제 실시 및 부산, 대구 등 오염이 심한 수도권 외 대도시 대기개선대책 본격 추진하며 상수원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물환경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수도물 불신 해소를 위한 '자연의 물 맛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략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원을 달성한다.

미래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환경컨설팅업 본격 육성하고 한·중 환경산업·시장 정보망 구축·운영, 동·서남아 지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행정 혁신을 통한 최고의 환경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는 거버넌스에 의한 고객지향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국가 환경종합정보 포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환경부는 1990년대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환경투자 및 각종 선진환경정책의 결과로 한강, 낙동강 등 상수원 수질개선, 대도시 아황산가스 농도 저감 등 대기질 개선, 1인당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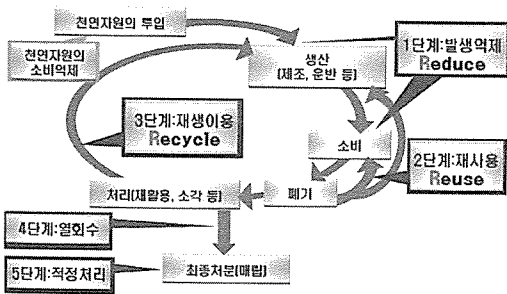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환경성 질환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아직 부족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의 수준은 아직도 낮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전정책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이 소각장이나 매립지에서 최종 폐기처리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리시스템에서 자원으로 재순환되는 요람에서 요람까지(Cradle to Cradle)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물질관리를 위한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연료 및 전력생산 등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 종합계획 (Biomass 코리아 2020)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화시설을 전국에 보급한다.



(자원순환형 사회 개념도)

한편, 총 1,023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장 7개소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8천만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물이용의 지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10.6억톤의 용수절감을 위한 ·제2차 수도물 수요관리종합대책(2007~2015)을 수립하고 수

질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의 취수원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취수원 다변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수로 도심내 인공하천 조성 : 부천 북부하수처리장〉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원 달성을 위해 세계 지역으로 전방위적인 환경산업 마케팅 활동이 강화된다.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등 환경특수와 동남아·중동지역의 상수도 수요 급증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2차례 파견하고 동·서남아 지역 2개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등 중장기 로드맵을 금년말까지 마련하여 2015년까지 물 시장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및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제시 등 사회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국가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칭·지속가능발전이행추진을 위한 법률(안)·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관련 연구·교육·산업·비즈니스의 종합 환경콤플렉스인 에코커뮤니티를 조성, 동북아 환경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에코시티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 녹색구매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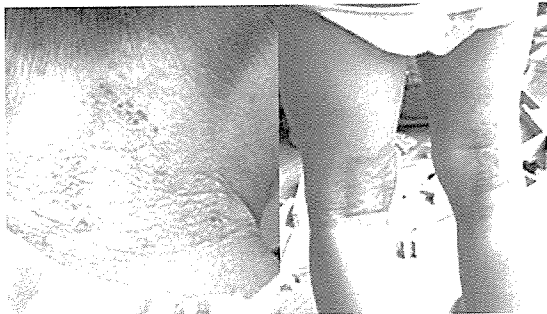
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확대하고 산업계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를 2007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사회전반에 녹색소비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어린이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환경오염 민감계층인 산모와 영·유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후 4~5세까지 아토피, 천식 및 성장발육 장애 등 질환발생을 추적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 노출과 출생결함 등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여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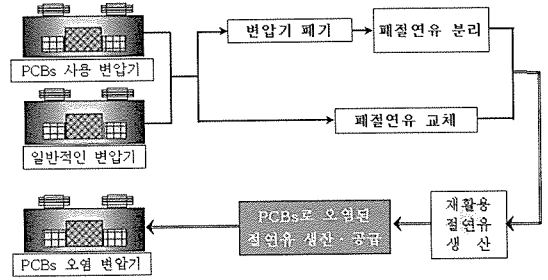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또한, 주요 하천별로 어폐류의 수은(Hg) 축적량을 조사하여 어린이 등의 일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권고하는 정보시스템도 개발하는 한편, 어린이용품중 유해물질 피해사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에 대한 납 등 화학물질 노출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이옥

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까지 PCBs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병원 등 민감시설에서 사용중인 4,000여대 변압기, 콘텐서의 PCBs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배출자 추적, 적정수거·보관체계 마련 등 적정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CBs 오염경로〉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민간보육시설을 포함시키고 적용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KTX, 지하철 등 대중운송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도 마련하여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자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먼저 금년 6월부터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레저·관광단지, 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성 검토평가단을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계적인 친환경도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대행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등



고 북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가온실가스 통계구축을 위해 TMS를 이용하여 발전 등 4개 업종에 대한 CO₂ 배출량을 측정하여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시멘트·화학·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환경 등 부문별로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후변화대응 아·태지역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예산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총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UNEP에 기탁하고 한-UNEP간 협정을 체결하여 북한환경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환경부는 2006년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일속의 혁신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최고의 환경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혁신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행정시스템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ITA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국민 포털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 기술수준을 갖춘 대기오염 원격자동감시시스템(KTMS)을 브랜드화하여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KTMS를 실내공기질, 환경소음, 수질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폐기물 및 유해물질 위치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IT와 환경정책을 접목하여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전체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부내 모든 업무와 정보자원을 분석하여 각종 환경정보를 윈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환경종합정보포털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환경정책 개발체계를 통하여 환경정책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한다.

환경부의 대표적 민원업무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참여와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자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시민단체 등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